

‘상법 개정’ 통해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제도개편 한계… 혁신산업 육성 병행해야”



유토이미지

자본시장 과제

‘트럼프세션’ 전세계 경제 흔들
관세전쟁 발화 환율전쟁까지 확산
韓 성장률 0.8%…글로벌 위기급
외인 탈출에 개인투자자도 이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내려간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등 돌발 변수가 덮쳐왔을 때뿐이었다. 제로 성장(0%)에 갇힌 한국경제 실망한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투자금을 빼 미국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외국인 발길도 똑 끊겼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높은 파고에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안팎으로 힘겨운 상황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기회일 수 있다. ‘어둠의’ 시기가 그간 묵혀거나 미뤄둔 자본시장 제도 정비에 나서기 편한 여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활황기에는 유동성 잔치 속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만 침체기에는 화란 여론이 제도 개선에 우호적

인 쪽으로 흐른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자본시장의 대못을 뽑고, 시장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본시장은 가계 여유 자금을 기업 투자금으로 돌려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가계로 환류시킴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재명시대 자본시장 새 장 열리나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돌아갔던 주식시장에 새로운 희망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경영진과 독립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의 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 방식을 도입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또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와 위임장 권한 행사의 의무화, 소액주주의 의견을 이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도 도입,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을 적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 마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규정 마련 등도 언급됐다.

이재명 “자본시장 정상화” 천명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 확대 추진 물적분할·자사주 소각도 손질 외국인 투자환경 대폭 개선 예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노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며,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지배구조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이에 맞춰 상장 및 유지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약 지켜진다면 ‘퀀텀 점프’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질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 실현 수단이 다양화되고 이사회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온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법적 책임 강화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영진이 리스크 회피형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장기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책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연구개발(R&D) 투자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보수적 경영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며 “단기 수익을 노린 주주 소송의 남용, 외국인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입법 후폭풍 등에 대한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혁신 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지원이 병행돼야 자본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